

# 공수처, 尹 4차 출석 요구냐 체포냐 막판 고심 중

### 尹,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공수처, 강제 신병확보 검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고문청 수사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측근 변호인 선임이나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동문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결국 오후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조사는 무산됐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조본은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속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과 적법 절차 준수 등 여러 가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오 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 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도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나간다고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중요업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법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즉각 퇴진하라”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8차 광주시민총력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확보...尹 지시 등 증거보강 주력

### 앞서 포렌식 중단된 전화...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다시 분석 착수 '시그널' 등 메신저 대화 내역도 조사...김 측, 압수 불복해 준항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중요업무종사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6일 영장을 집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오는 30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잠관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이 이뤄질 때 김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김 전 장관에게 반환하는 대신 영장을 통해 재확보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가운데, 검찰은 휴대전화를 통해 앞서 계엄군 지휘관들이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메신저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내렸거나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김 전 장관이 지휘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보안성이 좋다고 알려진 메신저 앱

'시그널'을 이용해 계엄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기소 이후에도 이 같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소를 앞둔 군 지휘관들의 혐의 다지기를 위한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앞선 검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휴대전화의 정상(성질과 상태)에 변화를 가해 변호인단의 이익에 따라 압수 절차가 종료됐는데, 이를 숨기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불법 압수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발포 명령'

### 검찰 조사 "수방사령관에 총 쏘더라도 끌어내라 지시"

검찰 조사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쏘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계엄해제안 가결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2·3년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면서 작전을 계속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업무 종사,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 핵심인물 중 첫 기소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총알과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것

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사태 당시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이 사령관과 통화에서 "총을 쏘더라도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박종근 전 특수사령관에게도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의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서버를 반출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설계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